

패스트트랙 단축·코스피 국조… 여야 ‘8월 힘겨루기’ 예고

입법 주도권 싸움 등 정국 긴장
민주, 연말까지 민생 입법 등 속도
국힘, ‘연쇄 국회법 개정’ 저지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도 극한 대치를 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과제의 빠른 입법을 위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 등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 추천 과정도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코스피 급락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하라고 제안해 이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법상 8월 임시국회는 오는 16일 자동 소집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2일부터 임시회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날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됐다.

다만, 8월 초는 본격적인 휴가철인 데다 민주당이 8·17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치르는 중이라 본회의가 실질적으로 열리는 것은 어렵다는 관측이 대다수다. 이에 민주당 내에선 본회의가 이르면 13일쯤에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나온다.

8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되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 상정된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먼저 처리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패스트트랙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

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며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됐다. 이에 8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을 순차적으로 해갈 방침이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발의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1로 낮추고, 필리버스터 중 재석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할 시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로 회부됐다. 아울러 상임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경우 위원장을 강제 교체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검토되고 있다. 야당 몫 상임위에서 입법이 지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연이은 국회법 개정은 연말까지 민생 입법, 국정과제 입법에 속도를 내려는 취지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뿐 아니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등 그간 난항이 있었으므로, 국정과제 수행에 빠르게 속도를 내야 하는 정부·여당 입장에서 개정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연쇄 국회법 개정’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법에 대해 “국회를 민주당의 거수기로 여기고 앞으로 더 빨리 손을 드는, 말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합의로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선관위 특검(특별검사)법도 갈등의 도화선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일단 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 절차에서 여야 간 이견이 예상된다. 특검법은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2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는데, 이 국민추천위 구성부터 운영까지 이견이 예상돼서다.

특검 수사 범위로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뿐 아니라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 과거에 치러진 선거들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최근 주가 하락과 관련해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비정상이다. 작금의 상황이 빚어진 원인과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고, 주식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여투쟁의 한 방식으로 최근 주목도가 높은 민생 이슈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두고도 민주당과 낯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미국서 AI, 남미서 자원…李 순방 마무리

5개국 ‘경제안보 외교’ 성과
‘美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발표
남미서 공급망 안정·자원 확보 집중

미국과 남미 3개국(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독일을 거쳐 자국을 한 바퀴 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국 순방이 3일 끝난다.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진 이번 순방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최장 기간 이뤄졌다.

이번 순방의 키워드는 ‘경제안보’였다. 첫 순방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선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인공지능(AI) 동맹’ 구축하는 데 총력을 다했고, 남미로 넘어가서는 핵심 광물과 에너지 분야 협력 확장, 그리고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TA) 협상 재개 등 통상 분야의 성

과가 있었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마지막 순방지인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간담회 일정을 소화한 뒤 3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글로벌 혁신과 투자의 본고장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AI 선도 기업들과 만나 ‘AI 세일즈’에 힘을 쏟았다. 이 대통령이 만난 기업들은 엔비디아, 오픈AI, 엔트로픽, 브로드컴 등 글로벌 빅테크 4개사와 한국의 삼성전자, SK, 현대차그룹, 네이버 등이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인 AI 산업에 대한 협력 비전을 공고히 하고자 ‘샌프란시스

코 AI 선언’을 발표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와 협력을 요청했다.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는 총 9500억달러(약 1375조원) 규모의 반도체 협력 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 국민연금공단은 실리콘밸리 및 전 세계 스타트업 투자를 선도하는 벤처캐피털(VC) 6개사와 장기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같은 행보는 집권 2년차를 맞아 첨단 산업 중심으로 경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국제 무대에서 AI 산업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어진 남미 3개국 순방 성과는 핵심광물 협력, 공급망, 에너지, 무역협정 등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3개국 정상들과 각각 양자회담을 통해 핵심광물 협력을 관한 약속을 구체화한 정부 간 문서 체결을 이뤄냈다. 핵심광물은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 요소인데, 보호주의 무역 기조로 인한 공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다변화에 나선 셈이다. 브라질은 희토류, 칠레는 리튬과 구리, 아르헨티나는 리튬이 풍부하다.

원유 수입원의 지변을 넓히려는 노력도 이어졌다. 대한민국 정상으로선 22년 만의 방문을 계기로 한-아르헨티나 양국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아르헨티나산(産) 원유 수입의 안정적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한-브라질 정상 회담을 계기로 브라질과 ‘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하고 재생에너지 등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메르코수르를 주도하는 브라질·아르헨티나와 무역협정 협상을 연내에 재개하는데 합의했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타결된다면 2억8000만 인구의 거대시장에 우리 상품의 원활한 수출길이 열리게 된다.

또 한국과 첫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칠레와는 현대화 논의에 합의하며 한-칠레 자유무역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했고, 브라질과는 ‘경제·통상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공식 방문 및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타결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혜택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순방을 통해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러시아를 제외한 주요 20개국(G20) 회원국과 모두 양자회담을 가지며, G20 의장국 활동을 위한 지지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예진 기자

국힘, 형소법 개정안 반발…李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오늘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 개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검찰개혁이 아니라 ‘입법 폭거’로 규정하며,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 규탄 및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방침이다. 핵심 대응 기조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대체 법안 마련 ▲법적 대응 ▲대여 여론전 강화 등의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기 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전

달하고, 통과된다면 새로운 대체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 소원, 개별 사안을 대상으로 한 위헌법률 심판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규탄하고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촉구를 위해 오는 3일 오전 9시에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당 차원으로 준비하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보은 수석대변인도 2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이들은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이라며 “이 대통령은 즉시 거부권을 결단해 민심에 역행하는 입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중진인 윤상현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70년 만의 형소법 개정’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은 없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경찰에 넘기는 것에만 골몰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고위 관계자도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국민의 61%가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하고, 폐지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생을 돌본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울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보완수



국민의힘은 지난 31일 국회를 통과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단순한 검찰 개혁이 아닌 ‘입법 폭거’로 규정했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한 모습. /뉴시스

사권의 일부 필요성 언급 ▲보완수사권 존속 여론 우세 ▲공소 기각 사유 신설 논란 불식 가능성 등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럼에도 신 교수는 “(국무회의가) 8월 17일(민주당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이전에 열리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이후라면 행사할 수 있다”며 “그것이(국무회의 개최 시점) 중요하다”고 본

다”고 보았다.

다만 그는 최근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 행보가 여론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보수의 목소리가 투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여론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면서도 “중도층의 호응을 끌어낼 수 없으면 (여론에) 크게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